환경과 反차별

NO. 1.

목 차

전문과학주의라는 환상의 비판[1)]

-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구축을 위하여 -

야기 타다시(八木 正)[2)]

1. 실천적 과제와 사회학의 자기변혁

– ‘생활 실천적 사회학’으로 가는 길 –

사회학이 사회적 현실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1) 연구자가 연구대상 밖에서 파악한다(사회구조론).
2) 연구자가 연구대상 안에서 파악한다(생활구조론 또는 생활세계론).
3) 생활자(민중) 자신이 스스로의 생활상황을 파악한다(생활실천의 사회학의 가능성).

이 글은 필자가 위 세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시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 경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는 사회학자는 사회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실천적 과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우월성을 버리고 민중(주민)과 서로 손을 잡고 연구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인식주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자각에서 사회학 그 자체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를 관념적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활동경험에 입각해서 고찰했다는 것에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민중적 입장, 생활실천, 사회학의 자기변혁)

---

1) 『원전은 차별로서 움직인다』(八木 正, 明石書店, 1983년)는 1,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2부의 1 ~ 5절 중 1절과 2절을 번역한 것임.
2) 前, 오사까 시립대학 사회학과 교수

(1) 사회적 현실로 파고 들어가는 사회학

사회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사회학이 사회적 현실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결정될 것이다. ‘이론’, ‘일반화’라는 이름으로 현실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도피하는 자리에서 관념적 사변에 학문의 존립기초를 두는 따위의 사회학은 그것이 아무리 선견적이고 현실적이라 해도 여기서는 논외로 할 수밖에 없다. 또, ‘실증’, ‘객관’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지상주의적 사회학에 대해서도 그것이 테크노크라트적인 입장에서 사회체제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문제삼지 않고 단순히 조사기술의 정밀성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상세하게 말할 여유도 없고 또 그러한 담론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래 강조된 ‘이론과 조사’, ‘이론과 응용’의‘통일’이라는 차원에서 문제삼는다는 그 자체에 위화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소 모가 나는 말을 해서 안됐지만 이러한 논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입장(‘과학주의’도 포함)에서든 간에 중앙주의적 테크노크라트중심의 발상이거나 어느 쪽일 것이고, 그 어느 쪽도 민중에게는 거의 관계가 없든가 기껏해야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가 거의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은, ‘지식인’의 우월적 입장을 근본적으로 자기비판하고 민중적 입장에서 사회학을 재구성하는 데 활로를 찾으려고 모색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책에서는 종래의 사회학이 사회적 현실에 어떻게 관계했는가에 대한 사회학사적으로 재검토하는 등의 빗나간 작업을 당연히 단념할 수밖에 없다. 단지 나 자신이 지금까지의 사회학연구의 궤적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 내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은 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서술한대로,

① 연구자가 연구대상 밖에서 파악한다. ㅡ 사회구조론

② 연구자가 연구대상 안에서 파악한다. ㅡ 생활구조(생활세계)론

③ 생활자(민중) 자신이 스스로의 생활상황을 파악한다. ㅡ 생활실천의 사회학의 가능성

이상 세 가지 단계는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해도 괜찮다. 세 가지 단계 중 앞의 두 단계에 대한 각각의 사회학의 특징은 새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①은 기능주의적이든 구조주의적이든 또는 계급 투쟁적이든 사회복지적이든 그밖에 무엇이든 간에 연구자가 그 어떤 관점에서 생활자인 민중이나 그들의 생활을 연구의 ‘대상’(객체)으로 해서 밖으로부터 해명하고 이론화한 사회학 이론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②는 어떤 의미에서 ①의 한계성을 자

각하고 그것의 극복을 의도한 것인데 연구자는 같은 연구대상을 가능한 한 안에서,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생활자의 차원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생활사회나 생활세계 등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사회학이론이다. 일본에서는 각종 '생활구조론'과 외래의 사회학이론으로 '생활세계론', '에스노메소달로지(Ethnomethodology)[3]', '심볼릭 상호작용론'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자는 ①의 입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②의 관점에서 양자의 통합을 시도한 시기가 있었다. 주의해야할 점은 여기 설정한 ②와 ③의 제 단계는 각 전 단계인 ①과 ②의 모든 이론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 전 단계의 이론을 포섭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을 시도한데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②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는 바 연구대상 내부에 깊숙히 들어가면 갈수록 ①의 분석에서 밝혀진 사회의 객관적 구조가 더욱 절실하게, 더욱 정확하게 보였던 것이다. ①과 ②는 이론으로는 어떻든 간에 결국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입각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는 두가지 관점으로 번갈아 입장을 옮기면서 관찰을 되풀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아무리 깊숙하게 ②의 입장으로 파고 들어가려 해도 실제문제로 연구자와 연구대상인 생활주체의 거리는 영원히 축소되지 않으며, '대상'과 '일체화'되었다는 착각에 자기만족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간격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단념하는 게 좋을 정도의 문제다. 교수자격이 주는 특권을 한동안 버리고 여공이 되어 사고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노예노동을 몸으로 체험한 유명한 시몬느 베이유도 그게 아무리 감동적인 헌신이었다 해도 결국은 자신의 지식인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으며 불행한 사람들과 자기가 서로 다른 '처지'에 있다는 것을 통감하는 데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자신들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침묵의 섬'을 굳게 지키는 개개 노동자에 대해서 그는 아마도 초조감을 느끼면서 체념해야하는 경지로 빠져들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연구대상과의 '일체화'는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지식인에게 냉소를 퍼붓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비난이나 조소는 약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일은 드물고, 약한 입장에 있다고 자칭하는 투쟁적인 인텔리운동가이든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언동하는 순전한 지식인이 퍼붓는 일이 많다. 후자는 특히 '진보적 지식인'이 '유치한 편향'을 배제한다면서 결국은 자신이 ①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불과하다. 이때 나타나는 태도는 지적오만으로 되돌아가는데 각자의 자유라고는 하나, 적어도 내가 선택할 길은 아니다.

3)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회학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무의식중에 ②에 대해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연구대상이 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③의 생각으로 이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진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더구나 어느 시기에 상대에게 무언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다.

이렇게 ③의 입장으로 이행하게 되어 어느 의미에서 비로소 ②의 관점을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대등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교류에서, 인간적 신뢰관계에서 서로의 세계를 더욱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상호간 벽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 각자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관계는 도저히 불식하기 어렵고 더구나 해소를 바라는 것이 잘못이다. 서로 위치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겠는가? 한편,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호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 게 아닐까? 이런 데에 인간사이에 오가는 마음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③의 입장에서는 연구자로서의 자기는 소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도 생활자의 일원으로 그들 대중 속에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연구자가 처음부터 져야 할 모든 책임을 생활자인 민중에게 전가하고 연구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연구자가 스스로의 방관자적인 입장을 극복하고 생활자로서의 자기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민중의 입장에 끝까지 철저하게 의거하고, 더불어 민중의 일원으로 생활자로서의 투쟁을 해나가면서, 전문지식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권과 지식, 기술을 100%로 활용하여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입장의 민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협동의 자세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외재적으로, 다시 말해서 지식인으로서의 우월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위로부터 민중과의 동정적인 환상에 빠지지 않고 자기자신이 민중의 하나로서 생활자임을 자각하고 생활자로서의 자기에게 회귀하는 것, 그리하여 철저한 민중적 입장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학식과 능력'을 타자로서의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자신으로서의 민중을 위해서 이바지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자세는 '민중에 대한 봉사'라는 위선적 자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것은 '봉사'라기보다 생활자인 자기, 나아가서 어머니대중에의 회귀와 협동이 될 것이다.

이처럼 ③의 입장에 철저하게 섬으로써 비로소 ②의 입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생활세계의 ‘내재적 이해’와 민중과의 ‘심패티(연민, Sympathy)’그리고, ‘아이덴티티(정체성, Identity)’는 가능하다. 거꾸로 말하면, ②의 입장에 구애되어 그곳에 머무르는 한 아무리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 한계성을 돌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반전해서 그들의 우월적 입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상 ②에서 ③으로의 이행 내지 도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세의 여하는 당연히 사회학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도 똑같다. 그러나, 사회학이 ‘규범과학’이 아니고 ‘현실과학’이라는 표방을 바꾸지 않는 한 특히 사회학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접근의 기본자세는 그만큼 엄격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수록 사회학의 사회적 실천성과의 관련성 그 자체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회학의 시조라는 A.콩트의 학설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학은 본래 과학주의의 견지에서 ‘사회의 재조직’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상에 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본래 ‘실천과학’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회학이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대적 전문화 추세에서 금욕적으로 ‘전문과학’으로서의 자기확립에 전념하는 데 오히려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것은 일단 실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순수한 학문적 영역의 확립과 과학적 유효성을 추구한 귀중한 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학이 필연적으로 걸어온 길이라는 데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학은 이것 또한 불가피하게 사회적 현실에서의 유리를 경험하고 일부의 사회학을 제외하고 사회적 실천과의 절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오늘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는 방법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회학의 사회적 현실과의 관련은 그저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관련을 맺는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적 실천성과의 관계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사회적.실천적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학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무관한가 이것이 이 학문의 현 상황에서 엄중하게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과정에서 사회학적 인식의 근본자세가 재검토되고 나아가서 발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단계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2) 실천적 과제와 사회적 인식주체의 전환

‘실천적 과제’라고 말하면 그럴싸하게 급진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러한 종류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학의 대응이 요구되는 현실의 제반문제는 날로 복잡화의 정도를 더하고 다양한 자락을 보이고 있다. 주요한 것은, 항상 예측을 웃도는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현대사회생활의 여러 모순이 다방면으로 심각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 규모에서 전반적 획일화가 진행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에 고유한 다면적인 제반문제도 쏟아져 나와 사회학의 진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을 요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와 실천적 과제 중에서 여기서 특히 문제삼고 싶은 것은 지방 또는 지역에서 일어난 갖가지 문제와 과제다. 그 이유는 다소 딱딱한 말로 중앙집권화가 가속되는 한편에서 지방으로 파급되는 문제의 영향이 강도를 더하면서 그 축소판이된 지방에서 단순하고 더욱 응축된 형태로 예민한 모순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각하에 필자가 거주하는 지방에서 주민을 주체로 한 ‘북륙지역[4]문제연구회(北陸地域問題研究會)’의 결성을 호소하고 활동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회의 결성은 앞에서 논술한 ②에서 ③으로의 입각점의 전환과 도약을 상징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우선 그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북륙지역문제연구회(北陸地域問題研究會)’ 설립을 발기한 것은 1986년 9월이었으며 약간의 개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했다.

‘북륙지역문제연구회(北陸地域問題研究會)’ 설립취지서

전통적 지역풍토가 강한 북륙지역(北陸地域)도 최근 근대화의 물결을 따라 커다란 변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대응에 쫓기고 있다.

예를 들면 국철 노또선의 제3섹터화, 호꾸리꾸 신깐센, 지방공항과 군사기지, 도시와 과소지간의 교통, 외지진출 품팔이노동과 젊은이의 유출에 따른 과소화와 취락붕괴, 공장유치와 공업단지조성, 원전부지결정, 지역산업육성, 어업재편, 상점가 활성화, 유통과 소비, 촌락 가꾸기와 소도시 가꾸기 도시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전통문화와 옛 거리 보존, 지역문화 계승과 창조, 자연환경보호, 배제설체제, 학교격차와 선별교육, 가정교육의 현황, 장애아 교육의 올바른 방식, 폭력단과 청소년비행, 고령자처우, 노동분쟁, 여성취로, 신체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의 자립, 피차별 지구 행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4) 일본의 지역 명칭. 北陸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호꾸리꾸’.

나는 호꾸리꾸(北陸)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런 광범하고 다양한 지역문제에 뛰어들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부대조건이 없는 주민의 자주적 의지와 힘에 입각한 연구활동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나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회를 설치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또 원전이 현실화된 이 시기를 택해서 널리 호소해 보려는 결의를 굳혔습니다.

이 회에는 이른바 정치적인 의도란 하나도 없습니다. 당파적인 운동체로서가 아닌 연구적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공정한 관점에서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대강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호꾸리꾸의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연구회에 참가할 것을 호소합니다. 당신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지인들 중에 적절한 인사가 주위에 계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해 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모임을 키워 네트워킹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당면한 활동목표나 원칙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당 회는 호꾸리꾸 지역의 제반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주적 입장에서 연구할 것을 약속한다.
2. 회원은 호꾸리꾸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학식경험자’ 에 국한하지 않는 주민일반)에게 열려 있으나 회원은 자립한 개인의 자격과 책임에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3. 회원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 서서 상호계발과 상호학습을 한다. 당 회는 내외 여하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회원의 주체성을 존중한다.
4. 활동은 연구와 의견발표(구두, 문장, 영상, 일러스트, 기타)를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홍보,조사,상담,연수,교류.강연,출판등을 한다. 회원은 획일적인 참가가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하기 쉬운 방법으로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살리는 활동이 기대된다. 우선 회지를 만들고, 각자가 의견을 발표하고, 우편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활동스타일을 채용한다.
5. 활동비는 회비와 자주적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연구자금에 대해서는 영리나 정략종교선전과 무관한 학술적, 복지적 성격의 조성금 기부금에 한해서 받는다.
6. 연락소는 카나자와 대학교양부 사회학연구실에 두고 야기 타다시를 책임자로 한다.

1986년 11월 20일 ‘북륙지역문제연구회(北陸地域問題研究會)’로 미니컴(minicom)지 『이로리바따[5]』을 발간, 87년 11월 20일까지 20호에 이르렀다. 그 동안 집필자는 약간의 예외를 빼면 모두 일반주민이었으며 이것은 다른데서 볼 수 없는 현저한 특징이다. 대학관계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활자로서 집필한 것이니 본 연구회의 소기의 목적은 관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필자는 농민, 건설노동자, 대학교원, 여관업 경영자, 경영지 발행인, 회사원, 학원 경영자, 농업 선종 승려, 도예가, 퇴직 선장(읍장 입후보자), 중학교원, 농업 진종 신도, 출판업 대표, 직물업자, TV 카메라맨, 박물교사(학원강사), 지구노동조합 간사 등 대단히 다채롭다.

제기된 문제도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인심황폐, 지방 폭력, 노동자 식당, 스파이크 타이어의 범죄성, 학교급식과 전래산업, 폭력단 항쟁과 분열지배, 문화농업 확립, 21세기를 바라보는 지역개발, 자급자족하는 생활 도장 실천, 농사꾼의 생각, 품팔이 진출 지대의 원전부지문제, 이혼체험에서 본 가정론, 은인의 죽음에서 오는 허탈감, 도자기 제작판매 캐러번의 만남, 과소지의 원전입지와 마을 가꾸기, 가혹한 노또의 제염역사, 치매노인의 처우, 자원낭비의 문제점, 야스꾸니 신사와 진종신앙, 야스꾸니 신사와 반전맹세, 봉건적 호꾸리꾸 취락과 여성차별, 앙에하마 염전에서 보는 자연생태, 원전비판 영화제작, 폭주족 소년과 학교교육, 생명의 근원 자연소금, 탈원전을 향한 주민운동구축,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의 모럴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볼 때 현시점에서는 호꾸리꾸 지역에서는 역시 가장 심각한 원전문제가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직접 원전을 테마로 한 것만 5건으로 제일 많고 농업실천(4건), 운동론(4건), 여성문제(3건), 반전사상(3건), 노동문제(2건), 지역개발(2건), 자연보호(2건), 교육문제(2건), 그리고, 공해문제, 전래산업, 폭력단, 가정문제, 인생문제, 노인문제, 자원문제, 학문론이 각각 1건이다. 또 예상했던 대로 분리된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각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지역문제는 그야말로 종합적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는 종합문제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회가 감히 연구과제를 설정하지 않고 제기할 문제나 관점을 자유로 한 것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 나온 터에 마쓰에의 ‘신지꼬의 물을 지키는 모임’대표 세와님[6]인 호보다 께히꼬 시마네 대학교수는 주민운동발전의 열쇠와 교훈의 하나는 ‘지역차원에서 과학의 종합을, 주민운동이 현대과학의 책임일꾼’이라 하면서 지역문제는 필연적으로 종합적 성격과 주민적 기반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중요한 지적을 했다.

---

5) ‘이로리바따’는 일본의 전통적 난방 방식에서 불을 때는 난로를 ‘이로리’라하고 ‘바따’는 근처를 말함.

6) ‘세와님’이란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의 뜻

‘호꾸리꾸지몽껭’의 회원은 호꾸리꾸 자주자와 호꾸리꾸 관련자로 이루어지고 각자는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이시가와현 회원이 핵심을 이루고 있지만 ‘원전문제와 지역 가꾸기’가 연구회의 출발점이자 원점이었던 관계로 네트워킹은 주로 노또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카나지와나 도쿄 거주자도 노또출신자가 많은 게 하나의 특징이다.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노또지역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관계자로 하면 연구회의 중심은 오히려 노또에 있다고 하는 게 실제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애당초의 생각은 ‘노또지역발전연구회’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정도였으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또 노또를 근거지로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교류의 범위는 토야마현, 후꾸이현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성질상 무한에 가까운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일정범위에서 회원확대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 실정이다.

약 60여명의 회원의 내역은 앞에 나온 기고자이외에 어업선주, 문필가,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대학원생, 프리랜서, 진종승려, 사진작가, 공예작가, 트럭운전기사, 학원장, 주부, 안경점 주인, 퇴직 선원, 공무원, 연구소 주재자, 수필가, 치과의사, 요리점 경영자, 건설노동자, 유기농업 종사자, 잡지기자, 회사원, 소학교 교원, 서클 주재자 등이다.

각자 생활에 전념하면서 현장에서 갖가지 지역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대응방법을 고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연구회이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같은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얼굴 맞대고 교류하는 일의 의의는 물론 크다. 그러나 일상적인 자기 일을 하면서 취미생활도 즐기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리해서 회합에 참가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한 모임형식에 어떤 정해진 틀을 만든다는 발상을 뛰어넘어서, 회보발행을 중심으로 우편.전화.잡담.개별모임.상호방문 등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의견교환이나 사람의 교류가 기획되고 또 기대되었다. 이러한 형식에 입각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어느 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에 대한 판단은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다. 현 단계에서는 문제제기조차 아직 충분하지 않고 문제의 전개도, 문제의 천착도 아직은 미진한 채 장차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천천히 서둘러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당면의 목표다.

그러면, 필자가 이러한 주민주체의 연구활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는 실제적 계기와 학문적 계기가 있었다.

실제적 계기는 ‘북륙지역문제연구회’가 발행하는 회보『이로리바따』의 전신이라 할 수 있

는 미니컴[7]『지역과 대학』의 발행주체가 된 ‘대학의 이상적 존재양식을 생각하는 모임’의 활동이다. 제 1호가 1980년 12월 18일 발행되고, 1986년 8월 29일까지 96호까지 계속 발행, 그 후 1년 휴간, 87년 11월에 97호 복간. 그런데, 이런 미니컴활동을 전개한 것은 80년 당시 카나자와대학의 이전을 둘러싸고 기괴한 움직임이 대학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유리(遊離)되어 독선주의에 빠졌는가’하는 것을 통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대학이전은 결국 ‘민주세력’을 자칭하는 모 혁신정당의 대학내 세력이 복합학부의 완전분리독립과 대학원의 설치를 도모하는 계책에서 이것을 ‘대학의 민주적 발전’으로 탈바꿈시켜, 현정부의 여당세력(특히, 후에 문부 대신이 된 이시까와현 출신 국회의원)의 중간에서 정치적 거래가 성립되어, ‘종합이전’의 이름으로 이전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교양부까지 포함해서 이전을 추진시키려고 획책한데서 발생된 것이었다. 그간의 사정을 토대로 한 다음 글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

발간취지에 대하여

최근 카나자와 대학의 ‘종합이전’을 싸고 극복할만한 움직임이 대학내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과를 허심하게 짚어보면 유감스럽게도 정치와 행정이 선행하여 대학인의 예지와 양식이 발현되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압력에 움츠러들어 혹은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말에 순응하여 학부의 이익을 얻어보려는 비굴한 태도가 서글프지만 대학 교관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학장이 있으며, 그는 학부의 연합적 이익을 내세우며 소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현실의 이름을 내세우는 행정권력에 머리를 숙인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대학의 발전은 시설과 설비의 확충과 집중화이며, 학과의 증설과 교관과 학생의 증원이고, 대학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설치이며, 최종목표는 일본해쪽[8] ‘기간대학’으로서의 대학의 격상입니다. 여기 그들의 물신숭배라고 할 수 있는 물량적 확장주의와 효율본위의 집중관리주의와 권위주의적인 권력굴종의 자세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놀랄 일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조직’마저 권력과 손을 잡고 이전추진에 광분하였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소수의견을 압살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단추를 잘못 끼운 혁신조직은 최후까지 보수적 이권세력과 설치한 링 위에서 각본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레슬링을 하고 있

---

7) 작은 매체. 소식지 같은…….
8) 일본의 경우 바다를 접한면을 일본해쪽, 태평양쪽으로 구분.

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보수혁신을 불문하고 대학에 정치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학이전문제로 전개된 움직임은 '政'·'官'·'財'·'言'의 상호유착과 일체적 책동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학문과 견식의 본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이전문제는 행정 측에서 제한된 시한을 통고했고 문부성의 속뜻을 헤아리고 당황한 나머지 엉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학교 직원조합이 주장하는 '자주'·'민주'·'공개'의 3원칙은 행정관료에 의해 알맹이가 없어지고 완전한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자주적이어야 할 대학인이 주장하는 이상적 대학에서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진정한 자주적 논의는 어떠한 기성조직에 의거하여 그것들의 이해에 입각한 발언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개인의 발상을 토대로 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꾸리꾸 추우니찌(中日) 신문」 문화란(1980.8.19)에 게재된 논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과 대학의 관계를 문제삼자는 기운이 가까스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이상적 존재양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카나자와 대학에 대하여 결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대학 만들기는 이제부터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학강좌를 개방하는 시혜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며 대등한 입장에서 현민과 교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민이 바라는 생활상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원전, 화력발전건설, 공항소음, 신깐센유치, 역전재개발, 역서개발, 자연파괴, 타쓰미 용수 취수구[9]의 매몰, 문화유적의 마구잡이발굴, 지역격차, 차별과 과소화, 학교격차와 차별, 스온병 등등 이상 어느 것이나 '대학인'의 적극적 관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실천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우리들의 학문도 더욱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연구자는 현민의 생활과 권리를 해치는 행정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문적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대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정한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종래 우리의 방법이 지극히 불충분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새로 첫발자국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대학이전문제를 통해서 대학지식인, 특히 '민주교수'를 자인하는 '대학인'이 권력에 아부

9) 물을 끌어쓰기 위한 수로 용수 취수구.

하면서까지 ‘대학발전’에 광분하는 실상에 접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지방국립대학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자문하게 된 것은 말하자면 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대학인의 위선과 독선을 추궁하면서 나아가서 대학의 사회적 존재의식이나 ‘대학개방’의 의미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이론의 전개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되풀이할 여유가 없어서, ‘시민과 대학이 공학(共學)하는 장(場)을 찾아’라는 원고를 참고하라.

특히, 위 논문 후자에서 성인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과 사회학의 실천적 성격을 논하기 위해서 새삼 ‘만하임 사회학’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고(故) 신메이 마사미찌 선생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학생시절부터 만하임의 ‘실천사회학’이라고 해야하는 진지한 연구자세에 주목한 나는 대학과 사회의 관계를 근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당연히 만하임의 언설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주민주체의 연구활동을 지향하게 된 학문적 계기라고 앞에 말한 것은 이것을 말한다. 지식인 주체의 인식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주체의 주민활동의 입장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회학적 인식론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식사회학’에서 ‘시대진단학’나아가서 ‘민주주의적 사회계획론’으로 필연적 전개의 의의를 재평가하는 일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진실한 인텔리겐챠의 지적 정직성을 일직선으로 밀고 나간 곳에 전개되며 위선적 당파적 지식인(그들도 민주주의를 소리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에게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찍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렇지만,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만하임이 말한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은 일본 사회학자의 대응방식은 그 자체의 타당성이 문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의 방향성은 어느 의미에서 이것과 역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성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식인 주체의 입장 그 자체를 방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발상의 역전을 의도하고 있다. 만하임과 같은 정직한 지식인도 끝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객관적 우월성이나 ‘지식지배’의 현실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생활세계론의 입장에 있는 P.L.버어거의 지식사회학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식을 인식의 타당성의 차원에서 음미하지 않고 지식 특히 종교를 정치지배의 맥락에 두고 생활주체에게 그 의미를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인식에 따라서 더욱 발전적으로 부연한다면 지식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현실의 사회구성질서를 용인 수용하며 이러한 입장을 유포하거나 민중교화를 통해서 현행지배질서를 보강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지식의 조직적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생활자 민중에게 지식인이 제

공하는 체제해석이외의 해석의 수단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도대체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른다. 이렇듯 글자 그대로 '무식'한 민중은 도그마 세계 안에 갇혀 지배 질서 안에 자진해서 참가한다. 이런 사태야말로 '지식지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확대 해석이 될 수 있기는 하나 버어거가 지식을 단순한 사회질서의 해석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 그 자체로 보는 견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하튼 이러한 파악을 더욱 실천적 입장에서 관철하면 지식지배의 허위성 내지는 한계성을 철저하게 추궁하는 것으로 민중 측의 지식탈환 지향으로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말처럼 우월적 입장을 버린 게 아닌 '민주적'지식인의 대리적 위임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민중이 본래 갖고 있는 건전한 생활지혜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식인이 만들어낸 작위적인 과학지식의 탈환이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의 주체성에서 지혜의 재생 또는 창조에의 관여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민중 자신의 스스로의 손으로 생활의 뿌리에서 갖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적 태도로 생활실천에 나서는 것을 지원하고 협동하는 게 오히려 지식인의 책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사회학의 자기변혁을 위하여

-'생활실천의 사회학'제창

대충 이러한 경위와 모색에서 가까스로 도달한 새로운 지점에 서서 나는 기성사회학을 재검토하고 이제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사회학 연구의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 '생활실천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미지의 사회학은 아직 형태를 갖춘 체계화된 것은 아니다. 이제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함으로써 다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렇게 수필식 형식밖에 안되었지만 최근의 생각을 엮은 논고를 전재해서 참고로 하겠다.

살아있는 민중사회학

'사회학은 어떤 학문인가?' 하는 질문을 잘 받는다. 실은 이런 질문이 사회학 연구자에게는 큰 고통이다. 그건 사회학이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 인간사회라는 대단히 종잡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엄청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고 '사회가 좀 복잡해진 거죠' 라든가 호꾸리꾸사람을 상대로 해선 '말하자면 사바세계의 학문입니다' 라 해서 얼버무리게 된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한 사바세계라는 말은 딱 맞아떨어지는 데가 있는

데 사실 sociology는 한때 '세태학'이라고 했던 때도 있었다. 어렵게 말하면, 사회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구조를 종합적으로 해명하려는 학문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쉽게 말해서 세상,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있는 그대로를 해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왜 이런데 신경을 쓰는가 하면 사회학이 그런 학문이라면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실은 세상 일반사람이지 전문학자라는 게 다소 이론적인 지식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나는 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세상을 고생고생 살아 온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날카로운 생각을 말한다. 대포집이나 이발소나 택시안 그리고 난로가에서 그런 상념에 잠기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저런 생각에서 나는 최근 특히 공허한 말만 재치 있게 늘어놓는 학자에게 같은 입장인데도 역겨울 때가 있다. 사회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업적' 쌓기에 바쁜 '학자' 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내막을 알기 때문에 더욱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학자'의 허명이 권위로 통하고 행정심의회나 자문위원회에서 '학식경험자'로 중용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관계구조는 매우 기만적이고 행정의 뜻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 '유식자'만을 가려서(공정성을 가장하기 위해서 소수 형식적 반대자를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다)그들의 견해가 객관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행정에 영합하는 이러한 학자를 '어용학자'라고 해야지 뭐라 하겠는가? 하기는 이런 일이 있는 게 사바세계인지 모른다. 그야말로 세상사는 깨끗한(공정한, 정의로운) 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뭔가 뒤범벅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게 "사바세계"라고 생각한다. 사회학 연구자는 이런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진흙탕에서 흙투성이가 될 각오도 해야한다. 잘난척하여 자기정당화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실사회는 그런 곳이고 게다가 민중은 그런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다. 사회인식의 주체는 반드시 전문학자가 아닌 생활자인 민중 자신일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원전'문제든 '과소지'문제든, 또는 '비행'문제든, '도시재개발'문제든, '유통'문제든 그 밖의 뭐이든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제3자'인 '학자선생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 '현지운동자' 자신이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학자가 배워야할 실질적인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의 체험에서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후꾸리꾸(北陸)의 주민들에게 호소하여 '호꾸리꾸 지역문제 연구회'(北陸地域開發硏究會)의 결성하고 미니컴

지 「이로리바따」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이상과 같은 생각에서 하는 일이다.

민중의 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거기 의존하면서 자기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투쟁하고 배우는 것이, 나의 학문과 인생에 살길(活路)을 찾아가자는 것이 나 자신이다.

한편, 최근 일본의 사회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일종의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것 같다고 생각된다. 지면관계로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괄적으로 약간 말해둔다. 우선, 특기할 일은 '일반시민사회'의 가치관에 입각한 편견과 차별을 '과학'이름에서 보강하는 데 불과한 '사회병리학'을 뛰어 넘어서 일체의 차별현상과 싸우고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사회학의 구축을 표방하는 '일본해방사회학회'의 결성(1985)이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회는 이제까지 사회학이 우월적, 방관적, 폐쇄적인 연구태도를 자기부정하고 각종 운동체에 실천적 입장에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배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학의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철저한 연구자세를 갖고 있다.

학회의 연구발표에서 제기된 문제는 대단히 다양하지만, 이제까지 피차별 부락, '재일 한국.조선인', '요세바(寄せ場, 노동시장)'사회, 심신장애자의 자립, 차별의식, 차별표현 등이 중심적 연구과제가 되었다. 이 중 '요세바(寄せ場)'해방에 대해서는 더욱 학제적으로 연구자, 실무자, 운동가를 결집시켜서 '日本寄せ場學會'를 87년 4월에 결성했다. 이렇게 단순한 방관자적 입장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실천적으로 제반문제에 정면에서 도전하는 학문을 구축하는 방향성을 이제 커다란 흐름을 확실하게 형성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사회학의 각 연구분야에서 이런 자기혁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로서는 그것을 지방생활에 뿌리를 두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서로 구축하고 싶으며, 그러한 입장을 '생활실천의 사회학'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나의 문제제기가 이 글의 목적이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추구가 말이나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2. 아나키스트 사회학 서설

– 권력 의존을 거부하는 민중의 사상 –

(1) 아나키스트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 '과학적 사회학'과의 결별-

'아나키스트'는 지배 권력으로부터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 분자로 탄압받고 말살당했을 뿐 아니라 혁신 조직측에서도 사회 운동의 교란자로 규탄받으면서 기피당하고 배제당했다. 그러나 세상에 이처럼 엄청난 오해와 곡해도 없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이권이나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뒤집어씌운 낙인(烙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모두 '아나키스트'를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아나키스트 조직에 얽어매서 규정한 공통적 잘못을 저지른다.

다니엘 게랭은 아나키(anarchie)라는 말을 고대 희랍어 '권력이나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수 천 년 동안 편견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이나 정부 없이 사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 아나키의 의미는 비속어(卑俗語)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서 혼란, 무질서, 질서 파괴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고 개탄한다. 그리고 그는 무정부(아나키)사상은 사회주의와 동의어(同意語)이며 사회주의의 한 지류(支流) 이외의 것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예를 회복시키고 테러리스트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 좀더 명료한 '자유 사회주의(소시알이즘.리베라뚜울)' 혹은 '자유 공산주의(코뮤니스무스리베라뚜울)'라는 말에 호감을 갖는다. 이러한 규정은 아나키즘의 본질 파악을 그르치는 오해를 피하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역시 통념적인 아나키즘의 이해를 전제로 변명을 시도한 데 지나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것을 사회주의의 지류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그 자체에 내재하는 반개인성, 억압성을 부당하게 은폐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아나키즘이 항간에서 오랫동안 '혼란, 무질서, 질서 파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혐오되어 온 것은 바로 국가 권력이 스스로 유지하려는 질서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지배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용인하지 않는 반란자에 대한 끊임없이 공격적인 언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노다 시게노리(野田 茂德)의 투철한 생각은 깊은 시사를 준다.

> '아나키'라는 '말'은 근원적으로 말할 때만 '말'의 고유한 뜻을 가질 수 있다.……'아나키'라는 '말'은 실로 모든 '존재'의 원초를 뜻하는 '근원어(根源語)'였을 것이다. 이 세계의 '전 존재'가 노예적 상태로써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 세계는 '아나키'한 '전 존재'로써 시작된 것이다.

> 오늘날 '아나키'가 근원어로 쓰여지는 일은 없다. '아나키'는 무질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아나키'의 근원과 괴리되어 '말'의 본래적 의미가 포함된 것은 아닌 것이다. '아나키'는 국가나 정부 그리고 권력에 의한 질서, 다시 말해서 노예적 사회 관계를 나타내는 질서 내에서 쓰여질 때 비로소 질서 파괴를 포함하는 무질서상태를 의미한 것이 된다. '아나키'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와 관계없이 권력 의지의 반영과 대치하는 상황에 '아나키'라는 말을 갖다 붙인 것이 오늘 아무렇게나 쓰이는 '아나키'라는 말이다. 이러한 '말'은 권력에서 노예에 이르는 질서의 회로(回路)를 선험적(先驗的)으로 받아들인 자의 '말'이다. '아나키'라는 '말'이 근원적으로 쓰이지 않는 한 그것은 노예의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뜻의 문제가 아니다. 아나키가 이렇게 근원적인 존재성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하찮은 정치적 맥락을 뛰어넘는 실재성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 '아나키즘'이란 나의 원초적 '존재'에 의해서만 '아나키'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나키즘을 유형(類型)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든 자기의 생명을 단순히 방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적 존재'라는 존재 양식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원초적 '아나키'에 도달할 수는 없다.……'아나키'는 생사(生死)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그의 말의 의미는 한없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나키를 이런 의미로 파악할 때 당연히 아나키스트는 특정한 정치적 신조를 갖는 사상가나 그룹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무정부 사상이나 자치 사상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극히 평범한 민중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아나키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なだ.いなだ[10]"의 표현을 따르면 역사적으로도 아나키스트는 특정한 시대에 한하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고 또 본인이 의식하든 안하든 간에 아나키스트라고 해도 좋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의 지평(地平)은 한없이 확대될 뿐'이고, 따라서 '너도, 나도 아나키스트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려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키즘 사상의 종자는 광범한 민중적 토양에서 뿌리박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정치적 운동그룹의 발생이 특수한 역사적 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정치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권력에게는 실로 무서운 사태가 된다. なだ.いなだ의 다음 말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정곡을 찔렀다고 말할 수 있다. "권력자는 국민을 법률

10) 일본인 아나키스트 '나다 이나다' 의 일본 표기.

로 묶고 형벌로 위협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질서 속에 가두고 지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우민(愚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는 국가나 법률, 지도자 없이도 자치(자주관리)할 수 있고 인간이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중앙 집권에 반대하는 사상이 소수자의 테러폭탄보다 훨씬 무서울 것이다."

'학술 논문'에 걸맞지 않는 '경향적' 서론이 되었지만, 이 글의 논지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또 아카데미즘의 권위성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객관성을 가장한 '과학적' 논문보다 민중의 실천과 체험에서 오는 목소리 속에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찌르는 진실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저러한 아나키즘의 갖가지 사상을 분류하거나 서로 관련시켜 그 성격을 논의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 다시 말해 지배 권력의 사상에 맞서는 민중적 아나키 사상에는 어떠한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그런 사상에는 어떤 과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있다.

모든 사상적 활동은 그 사상에 특유한 자연관, 영혼관, 인간관, 사회관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관념 체계를 사회학이라 한다면 민중의 아나키스트 사상에 있어서도 '아나키스트 사회학'이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의 특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일이 궁극적인 과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 민중의 원생적(原生的)인 사상을 직접 다루는 일은 지난한 일이며, 또 아무리 민중에 기반을 둔 사상일지라도 그것은 대개 최종적으로는 특정한 사상가의 제반 체계에 집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중이 거꾸로 그런 것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실제의 작업은 아나키스트 사상가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의 사상 체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검토 작업조차 없는 것이 사회학 연구의 현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과학적' 사회이론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평가가 높아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도 상당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지만, 아나키스트 사상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는 극히 미약하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나키스트 사상의 다양성, 비체계성, 비과학성에 있는 것 같다. 타까하따 미찌토시는 "아나키즘은 역사적인 근대 사회라는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에 관여하는 자세를 문제로 하기 때문에 아나키즘 측에 서는 시인이나 철학자에 비해서 사회 과학자가 드물지만 대학 교수를 배출한 마르크스주의나 근대주의가 역사적 근대 사회에 대한 법칙성, 경향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딛고 서서 유토피아를 구상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며, 사회과학적 분석과 운동론을 역동적으로 연관시킨다."고 하여 마르크스주의를 높이 평가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아나키즘이 역사적 근대 사회에서 도출해 낸 핵심적 관념은 ‘자유’, ‘반국가’, ‘반권력’이라는 ‘목표 가치’뿐이고 아나키스트가 현실을 문제삼을 때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인민’, ‘노동’이나 근대주의적인 ‘조직’, ‘생산력’ 등의 개념을 밀수입했다.”고 까지 혹독하게 몰아 부쳤다. 요컨대 아나키즘의 과학성의 결핍을 지적했다. 그러나 타까하따의 이러한 비판은 그의 과학주의적 사고의 독단과 아나키즘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를 드러낸 데 불과하다. 모든 형태의 억압성을 원리적으로 거부하는 아나키즘은 억압의 주요형태의 하나인 과학은 물론 사회 과학까지도 거부의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문제는 사회학이 사회 과학에 속한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는 한, 한 편에서는 아나키즘의 비과학성을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존립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일이다. 이 점에 관한 깊숙한 논의는 여기에서는 피할 수밖에 없으나, 콩트를 시조로 하는 근대 사회학의 주류가 오늘까지 일관되게 과학주의를 표방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지적해야 하며 또 사회학이 과학주의적인 이론 체계만으로 한정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결연하게 내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논점에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학의 성립에 대한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견해이다. 그는 물론 어떤 일정한 정치적 독단에서부터 과학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과학적 사고 방법과 명확하게 구별된 과학주의적 사고 방법을 문제삼는다. ‘과학주의’는 ‘어떤 사고 습관으로부터 발생한 분야와 다른 분야에 기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나아가 ‘주제를 고찰하기 전에 그 주제를 탐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확실히 ‘비과학적인 태도’라고 단정한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생시몽과 생시몽주의자에서 볼 수 있는 과학주의적 오만에 대한 지적이다. 생시몽은 뉴턴에 대한 열렬한 숭배에서 비롯된 ‘뉴턴평의회 계획’을 제안했다. 평의회는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생리학자, 문학가, 화가, 음악가 각각 3명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은 걸출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신을 대표하는 자’가 된다. 과학평의회는 이렇듯 최고의 정신적 권력자로 새로운 사회 조직의 중앙계획 주체가 되었고 또 모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도에 나섰다.

그 이후, 사회의 의식적인 재조직에 의해서 ‘혁명을 종식시킨다’는 생시몽의 욕망—그것이야말로 ‘과학에 의한 반혁명’이라고 할 만한—은 더욱 더 가열된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그것은 근대실증주의와 근대사회주의의 시각이며, 이렇게 양자는 결정적으로 반동적이며 권위주의적

인 운동으로 출발하게 된다. 과학자와 산업가가 결합한 힘에 의한 사회의 전제적 통치, 바로 이것이 생시몽 사상의 핵심이며 이러한 생각은 콩트의 '사회과학=사회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생각, 다시 말해서 정반대인 듯이 보이는 실증적이며 공학적인 사회학과 과학성을 자칭하는 계획주의적 사회주의가 과학과 산업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사회 지배라는 반동성에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하이에크의 지적은 양자의 본질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두 가지는 이를테면 집권적인 과학 지배 사상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계획.지도 이념에 있어서 민중과 민중의 자발성을 무한하게 억압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과학주의적인 사회학과 사회주의와 결별하는 지점에 아나키즘과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기점(起點)이 있는 것이다.

(2) 아나키스트 사상의 여러 계보와 기본 원리

- 개인주의.연합주의.공동체주의-

아나키즘의 본질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권력거부 또는 권위부인의 입장에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나키스트가 강조하는 것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혼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을 보여 준다. 또한 연구자의 아나키즘 분류 방법도 다양한데, 대표적 연구자인 우드 코크는 아주 간명하게 아나키스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이성의 아나키스트 - 윌리엄 고드윈, 에고이스트적 아나키스트 - 막스 슈티르너, 역설의 아나키스트 - 피엘 조셉 푸루동, 파괴의 아나키스트 - 미하일 바쿠닌, 탐험가적 아나키스트 - 표토르 크로포트킨, 예언자적 아나키스트 - 레온 톨스토이

그리고 오오자와 마사미찌는 현대 아나키즘의 사상적 도정을 짚어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계보를 구별한다.

1. 창시자적 아나키스트- 윌리엄 고드윈,피엘 죠셉 푸르동,죠사이어 워렌
2. 계몽적 아나키즘을 창도한 아나키스트-
   A. 푸르동주의(전기 푸루동주의 : 투우랑과 드·바브, 후기 푸루동주의 : 맥케이, 랭구어)
   B. 보스톤파 아나키스트(앤드류즈, 스푸너, 택커)
   C. 개인주의적 경향의 아나키스트(슈티르너, 입센, 에머슨, 소로우, 휫트먼, 카펜터, W·에리스, 와일드)

D. 근대학교운동(루이즈 밋셀, 프란시스코 페렐)
E. 종교적 아나키즘(톨스토이, 두호오볼파, 핫타라이쓰 공동체)
3. 행동적 아나키즘 운동
A. 바쿠닌과 바쿠닌주의(무정부 집산주의)
B. 바쿠닌주의의 전개(기욤과 주라동맹, 키차예프와 체르케조프, 마라테스타, 카피로, 코스타)
C. 프랑스의 행동적 아나키즘(루크류, 미셸, 부루스)
D. 행동적 아나키즘의 신단계(J. 모스트)
E. 크로포트킨과 크로포트킨주의(무정부 공산주의, A. 버크맨, 에마 골드맨 기타)

아나키스트에게 친근성을 보여 준 사람이라는 사회학자 호로빗츠는 아나키즘을 그 전략과 신조에 따라 다음 6가지로 구분한다.

공리주의적 아나키즘, 농민 아나키즘, 아나코 생디칼리즘, 집산주의적 아나키즘, 비밀 결사적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아나키즘 사상의 여러 파의 분류 기준이나 그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려는 데 있지 않다. 개개의 아나키스트의 특징이나 그들의 사상의 강조점이나 표현에는 당연히 이러 저러한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에 있어서 권력거부의 입장이 관철되는 한 그다지 구애받고 싶지 않다. 자잘한 차이점을 거론하고 개인주의적 또는 조직주의적 그리고 공동주의적 신조 등 각각에 입각해서 다른 것에 대한 공격을 서두르는—이를테면, 개인절대주의적 입장에서 조직적 생디칼리즘을 비난하고 자기의 입장을 '순정'아나키즘이라는 주장—태도에는 그다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문제는 무원칙한 타협이나 겉치레적 통일 추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나키즘의 존립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는 현실에 입각한 검증과 철저한 상호 비판이 요구된다. 오직 무의미한 관념상의 대립이나 항쟁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의 여러 계보에서 우리는 아나키즘 사상의 기조(基調)이며 중점이 되는 공통적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율적인 개인주의[11]와 협동적인 연합주의와 자치적인 공동체주의의 원리가 그것이다. 위 3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분리시킬 수 없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실제적 상황에서 보면 두 가지를 연계하는 매개항(媒介項)이 연합주의의 원리이고, 이것은 주체성을 내세우는 개인주의적 기저

11) 이하 내용에서 굵은 글씨는 인용자인 필자가 강조한 것임.

에 서면서 협동화에 대한 자세와 전망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배타적인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주체와 주체성을 존중하는 자율적 원리라는 데서 자유연합이나 협동화의 계기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는 중앙집권적인 전체주의와 대립하는 이념이며, 주체성의 존중이라는 의미의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디까지나 자발성과 자치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따라서 대등한 연합에 입각한 소규모의 비고정적인 분산적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원리와 연관시켜서 개인이나 결사, 그리고 사회라는 사회학상의 기초 개념을 고찰해 보면, 우선 이러한 개념들이 아주 추상성이 높은 서양적인 관념이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일본에 신학문 Socialogy가 들어 왔을 때 번역 문제로 몇 고비의 변천이 있었으며, 이것은 일본 사회학사 문헌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초가 되는 Society나 Individual의 번역(일본어)에 대한 고충이 있었다고 한다.

사이또오 타께시에 의하면 메이지초의 지식인은 동양의 전제적 절대자에 예속된 것과 달리 서양에는 자유 평등한 인민의 상호 결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서양의 차이를 알았으나, Society나 Individual이라는 관념은 일찍이 일본에 없었으며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도 없었기 때문에 번역에 곤혹을 치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첫째, 동양에는 요즘 말하는 '수직사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양의 '수평사회'의 인식이 결여되었었고, 둘째 일본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평등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개념이 없었으며, 셋째 사회의 개념이 아주 추상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구상성(具像性)을 결여하는 이러한 상보적 개념(相補的 槪念)은 한자어(漢字語)를 가지고 오늘과 같이 번역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본래의 뜻이 일본에 정착했다고 할 수 있었을까? 특히 사회의 기초인 개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개인주의가 제 마음대로 하는 이기주의와 혼동되는 경향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하기는 서양에서도 Individualism의 이해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고, 그것은 아나키즘의 주장이나 운동에서 이질적인 조류를 형성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일은 유사한 개념인 egoism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원래 자아의 독자성이나 불가침성을 주장하는 것이면서 일반적으로 altruism(이타주의)과 대립하는 배타적인 이기주의와 동의어로 다루어졌고 또 Individualism과의 구분도 확실하지 않았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또는 에고이스트로 제일 먼저 거명하고 싶은 사람은 맥스 슈티르너이다. 유명한 그의 서언(序言)은 이렇게 기록된다. "신의 것은 신의 것이고 인간의 것은 인

간의 것이다. 내 것은 신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니고, 진(眞) 선(善) 정의 자유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나의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며 오직―내가 유일한 것과 같이 유일 바로 그것이다. 나에게는 나를 초월하는 아무런 것도 없다.”

에고이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슈티르너의 말이지만 이보다 더 철저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독자적 사회학을 제시한 사상가로 조르쥬 바란트가 있다. 바란트는 그의 논문 「아나키즘과 개인」에서 슈티르너가 “사회는 너를 사용하지만 결사는 네가 사용한다.”고 한 데 대해서 “구별지으려 해도 구별할 수 없다! 사회와 결사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는가? 결사가 결정화(結晶化)돼서 곧 사회가 되어버리는데 슈티르너의 동의 따위를 얻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빈정대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 집단의 형태를 지닌 ‘결사’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달려 있다. 개인의 고유한 독자성에 집착하는 한 이런 주장도 성립될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사회성까지 철저하게 부정해 버리는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확실히 개인에 대해서 부조리한 존재이다.(그러한 부조리를 일생동안 끊임없이 문제삼은 것은 시몬느 베이유였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에 대한 의존에서 일순간도 도망칠 수 없다. 만약, 사회에서 단절된 개인의 독자적인 존재성을 주장하는 게 바란트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그의 사상의 관념성을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것처럼 개인주의는 자타를 불문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본체성을 존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협동적인 사회성으로의 계기를 그 자신 속에 내재하지 않았다면 아나키즘의 연합주의의 원리는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 사람들과의 공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자립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공동의 신화(허구, 환상)’라는 권력에 의한 강제의 사술(속임수)과 한통속이 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권력의 억압은 오히려 타자와의 대등한 공존성이나 협동성을 부정하는 개적 존재의 부인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개인성과 사회성이란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반면, 사회는 실로 개인이 그것을 어떤 형태를 원하게 되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없이 개인을 능가하고 꼭 쥐고 놓아주지 않는 부조리한 힘으로 버틴다. 바란트가 말한 대로 확실히 사회와 결사 사이에 확연한 경계선을 그을 수는 없고, 또 집단이나 결사에서 ‘지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억압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잠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건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부조리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자율적인 개인의 협동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어떠한 아나키도 성립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추상적인 관념에서 구체적인 세계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 일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 사회는 아니 결사조차도 권력의지나 권위숭배와 같은 질서 감각에 의해서 근본부터 독이 스며든 노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회’를 말할 때는 실은 이러한 실제의 권력사회 또는 억압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억압성을 갖는, 따라서 기만적인 내막을 갖는 현실적 사회라 해도 그건 역시 하나의 ‘사회’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회라 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오는 당면한 구속까지도 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로 여기에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이 출현되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란트의 주장은 시종 추상적인 관념성의 틀을 벗지 못하는데도 일반적인 ‘사회학’과 다른 특이한 고찰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 의식과 사회적 의식을 명확히 구별하고 “개인적 의식은 명석함에서나 솔직함에서 사회적 의식에 우선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뒤르켐과는 반대되는 명제이고, 집단적 사고는 거짓이고 사려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점에서 베이유와 상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은 나 자신도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런 생각에 이르렀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를 개인주의의 대극에서 파악한 점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은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는 모든 사회적 교의(敎義)를 말한다.―(생략)― 개인주의는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는 대신 개인이 그 자신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개인은 고유의 가치와 자립적 권리를 가져야 하고, 사회 이상은 가장 완전한 개인의 해방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교의(敎義)로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사회주의에 내재하는 반개인주의적 싹이 커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과도한 관리나 규제로 나아가고,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권리를 열망하고, 맹목적이고 폭군적이고 편견에 영향받기 쉬운 세론(世論)에 의한 정신적 제재가 머리를 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사회와 개인은 서로 즉각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면서 쌍방이 모두 전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되지 않고 충돌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발전한다고 짐멜은 말한다. “사회는 개인들 각자가 단지 구성원이 되는 하나의 전체이기를, 그리고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이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하고 자기 개조를 이루어 마침내 완전히 이러한 직무의 최적임자가 되어야 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그 자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통일 본능과 전체 본능은 이런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개인은 그 자신이 완전하기를 바라고, 사회의 육성을 돕는 데만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기의 여러 가지 능력 전체를 전개하려 하므로 사회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 능력의 조합이나 교체를 요구한다 해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 요소에 대해서 부분적 기능을 요구하는 전체(사회)와 스스로 하나의 전체이려는 부분(개인)의 모순은 원칙상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추상적인 기본 원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역학 관계에서 보면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개인의 다양한 자질, 능력, 정력을 그것이 바라는 그대로의 규격적 양식으로 한없이 흡수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 개인은 자신의 개적 전 존재의 의미를 굴복적으로 부정당하면서 압도적인 물리력(物理力) 앞에서 사회에의 굴종을 강요당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사회와 개인 간의 이런 기본적인 힘의 관계를 무시하고 사회중심주의를 부르짖는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의 개인에 대한 물리적 강제성의 용인자이며 인식자가 된다. 사회주의가 아무리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구성적인 계급 존재를 가정하고 그것에게 '사회변혁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인간해방'의 역사적 사명을 기탁해도 그게 수단으로서 사회적 힘에 의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그런 운동 과정에서 여러 개인은 끊임없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은 권력을 추구하는 당파 집단의 전제 지배를 실질로 하는 '전체주의'인 것이며, 그것과 숙명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아나키즘은 불가피하게 개인주의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현대 아나키스트 사회학의 과제

- 기술문명사회에 대한 근원적 비판의 관점 -

만약 '아나키스트 사회학'이란 것이 성립된다면, 언제까지 '아나키스트 사회학'이란 이름 아래 추상적 사상이나 이론을 적당히 가지고 놀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용서없이 현대의 자연, 사회, 인간, 정신에 심각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데다가, 단박에 극한으로 치달을 듯한 테르놀로지 문명은 그 중압의 정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과 현대사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승효과까지 낳으며 역사상 전례없는 강력한 억압작용을 전세계적 규모로 가하고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복합적이고도 강력한 압력에 스스로도 산산이 부서지면서, 흉칙하게 변하고 있는 자연이나 사회를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들리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의 위구심이나 경고를 압도, 말살하는 목소리—인간이 이루어 낸 과

학기술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예찬의 목소리뿐인 것이다.

인류가 지복(至福)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파국으로 달려가는 게 누가 보아도 명백한데, 거의 모든 사람이 환상에 젖어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갈 길을 잃고 있다.

마르쿠제가 말한 바와 같이, 고도기술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인간의 주체성이 뿌리째 뽑혀나갈 뿐만 아니라 쾌적함과 풍요로움, 고통이나 근심에서의 해방이라는 저항운동 그 자체가 의미를 잃고 체제비판의 힘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역동적인 긴장관계를 잊은 '일차원적 인간'만 넘치게 된다. 여기에 사회변혁운동의 혼미와 거세(去勢)의 원인이 있다. 조직운동이 몰락했을 뿐 아니라 아나키즘 운동도 숨을 죽인 채 잠행(潛行)했다. 현대의 고도기술사회가 도발하는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 사상이 억압된 민중에 뿌리를 박고 있는 한, 아나키스트 운동은 불사조처럼 되살아나서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품어본다.

사실 주의해서 살펴보면, 눈부신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형태로 광범하게 풀뿌리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대의 기술문명사회의 병폐와 그 본질을 근원적으로 문제삼는 다양한 비판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마르쿠제의 분석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형인데, 이것을 아나키즘의 현대적 부활이라는 논자도 있다. 에를리하겐은 이렇게 썼다. "어떤 의미에서 신좌익의 이데올로기는 현대의 사회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아나키즘을 재편성해서 부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현대의 아나키즘 이론으로 주목되는 『Anarchy in Action』의 저자 콜린 워드(Colin Ward)는, '아나키즘은 미래사회에 대한 사변적 환상과는 달리 일상생활의 경험에 입각해서 오늘의 사회가 확고한 권위주의적 경향에 있음에도 그것과 나란히 서서 기능하는 인간조직의 일형태를 그려낸다'고 해석하면서 나아가 그것은 '정부 없이도 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한 관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나키를 조직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일반통념에 반대해서, 아나키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아나키즘을 바라본다. 더 나아가 단순한 이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무정부, 무관리의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일단 아나키스트의 관점에서 인간사회를 바라보면, 하늘 높이 솟아있는 권력구조의 틈새에 이를 대체할 길이 나타나 있'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마음먹으면, 필요한 자재는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검증하려고 시도했다. 국가, 질서, 리더쉽, 사회구성, 조직, 도시계획, 주거, 가족, 학교, 놀이, 일, 경찰, 형무소 등등. 게다가 이런 여러 영역에

서 이론만이 아니라 아나키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행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조직, 코뮤니티.페이퍼, 아동복지운동, 공동세대, 흑인해방, 여성해방, 동성애해방, 수형자해방, 아동해방 등 끝도없이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들은 아나키즘의 말을 하고 아나키즘의 원리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정치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에서 배운 것이다. 그들의 조직형태는 자발적, 기능적, 일시적, 소규모 등 천천히 부드럽게 연합한 집단인 것이다. 그들이 의거하는 것은 회원증, 투표, 특별지도부, 다수의 추종자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서 항상 증감(增減)하고 결집에 다시 결집을 거듭하는 자그마한 기능적인 집단이다. 그것은 네트워크이지 피라미드는 아니다."

그의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다음 말은 더욱 인상적이다. "한편에서 지배자 일당의 얼굴만 바꿀 뿐인 혁명과 억압을 부드러운 억압으로 하거나 단지 효율을 올리는 등의 개량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혁명과 개량이라는 구별이 없는 혁명적이든 개량적이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치를 확대하고 외부적 권위에의 종속을 축소해 나가는 사회변혁의 길이 있다. 아나키즘이란 어떤 옷을 걸치고 있든지 모두 인간의 존엄과 책임의 주장으로서 정치적 변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적 자결(自決)과 자영(自營)인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콜린 워드의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주장에 현대과학기술의 파괴력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주목할 만한 고찰이 있어서 끝으로 그것을 소개한다. 머레이 북친의 저작이 바로 그것이다.

북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를 인정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인간해방의 의미까지 과학기술에 부여하려 한다. '빈궁─후혁명'이라는 고찰에서 그는 과거의 '빈궁'사회에서 사람들은 위계제가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에 시달렸지만, 이제 겨우 입구에 들어선 '빈궁─후'사회에서 사람들은 생활수단의 단순한 풍요 이상의 '생활의 다른 어느 것'을 향수(享受)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빈궁─후'사회에서의 풍요는 인간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안정, 자기표현에도 충분히 반영되리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으며, 요컨대 "'빈궁-후'사회는 현대의 풍부한 공업기술에 가리워져 있는 사회적, 문화적 잠재력의 전면적 개화(開花)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방의 공업기술'에 대한 이런 신뢰와 기대는 인류의 미래, 특히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과 밀착되어 있다. 그의 핵심적 주장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사회조직의 형태에 규정된다고 한 데 있다. 다음 말들에서 이런 그의 주장을 잘 보여준다. "환경의 위기를 부르조아 기구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상이며, 그것은 추

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는 선천적으로 반생태적이다…… 이런 종류의 사회에서 자연은 필연적으로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오직 자원으로만 다루어진다. 자연계의 파괴는 단지 오만한 실패보다 자본주의적 생산논리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이건 미래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늘 과학, 공업기술, 지식이 자연자체에 이익이 되도록 사회상태를 개선하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 혁명이 새로운 생태적 공업기술(Eco-Technology)과 생태공동체(Eco-Community)를 수반한 생태적 사회(Eco-Society)를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계가 멸망하든가 그 어느 쪽이 될 것이다"

그는 공업기술의 발전이 거꾸로 사회적 억압을 강화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자연의 전제조건을 자유의 조건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 해방의 가능성은 해방의 현실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공업기술의 발전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명확히 부정적인 사회로의 퇴행적(退行的)인 측면을 갖고 있다. 만약 공업기술이 자유를 위한 역사적 잠재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업기술의 부르조아적 통제와 관리가 현대의 사회조직과 나날의 생활을 보강한다는 것 또한 진실이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에서 공업기술과 풍부한 부는 사회의 대부분을 위계제와 권위주의적 현체제에 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실제적인 대중억압은 물론 위협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나 수사장치, 선전미디어를 체제에 제공한다. 체제의 중앙집권적인 성질에 의해서 풍부한 부는 정치적 장치에다가 독점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적인 경향을 보강한다. 요컨대, 공업기술과 부는 국가의 생활 전체적 환경을 조작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그래서 위계제, 착취, 비자유, 차별 등을 영속시키기 위한—역사적으로 선례가 없는 수단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이어, 황폐한 결과를 낳지 않고서는 사회, 환경, 자연을 통제.관리하여 개발할 수 없는 부르주아 사회가 이런 위기를 무릅쓰고 환경의 조작과 운용으로 나서리라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황폐화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열띤 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명은 통합적이고 개조적인 과학, 생태학에 맡겨진다. 자세한 설명을 할 여유는 없지만, 이 과학이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다루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자율적인 아나키 사회의 건설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연환경과 부단히 평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공동체의 창조 없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달성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힘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과학기술 그 자체에 내재하는 전문가의 오만한 억압과 지배에 대한 본능적 불신을 쉽게 씻어낼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러나 기술문명에 대한 근원적 비판에 관한 고찰은 이제 다른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발전도상국의 환경문제[12]

토다 키요시(戸田 清)[13]

발전도상국의 환경문제연구를 테마로 했다.

'발전도상국'이라고 하면 구미나 일본 이외의 여러 나라라고 이해하고 OECD 가맹국인 한국 등도 포함시켰다. 발전도상국은 사실상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지역(아시아 NIEs), NIEs와 비슷한 상황인 ASEAN 여러 나라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 핵보유국이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격차가 큰 중국, 선진국 공업지역과 거대한 빈곤층을 갖고 있는 인도, 산유국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등 '최빈국' 등 갖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문제도 다양하다. 한국이나 대만은 중산계급이 발달된 '다이아몬드형(선진국형)' 경제층 구조가 되었으며 대중소비사회화의 발전으로 자동차 공해, 세제 공해, 폐기물 문제 등의 '생활공해'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인도 등은 빈곤층이 아직도 많아서 빈부격차가 큰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에서는 1인당 자원소비가 아직 적기 때문에 '산업공해'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NIEs 등 공업화를 추진하는 나라에서는 선진국이 수십 년에서 200년 동안 경험한 공해와 자연파괴가 단기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판매금지를 시험실시한 푸탄 등의 예도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형 개발모델'을 전제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에서 볼 수 있는 '선진국형 개발모델'의 파탄은 이곳에서도 명백하고 동시에 보건지표(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등)의 개선을 비롯해서 '발전의 권리'를 발전도상국에 보장해야 하는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사회적 정의를 종합한 새로운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이것을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은 동시에 궤도 수정해야 한다.

아시아를 비롯한 발전도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최근의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몇 가지 소

12) 이 글은 講座 環境社會學 第 1巻(飯島伸子 외 편집. 2001년. 有斐閣刊)에 실린 토다 키요시의 글로서, 자연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관계를 탐구한 문제해결지향의 사회학이다. 참고로,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글은 5장 환경사회학의 국제적 동향 A) 구미의 환경사회학 B) 발전도상국의 환경문제 연구에서 B) 글을 번역한 것임.

13) 現, 나가사끼대학 환경사회학부 조교수, 『환경정의를 위하여』(창작과비평사, 1996년. 김원식 역) 저자.

개하겠다. 환경사회학에서는 1993년 7월 도쿄에서 ‘아시아 사회와 환경문제’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와 국외(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의 연구자의 보고가 있었다. 1997년도 과학연구비보조금에 의한 공동연구 ‘아시아 지역의 환경사회학적 연구’도 실시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환경회의는 국제적 공동연구로 『아시아 환경백서』를 간행했다. 환경경제정책학회나 OECD의 연구도 있다.

이하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한국.대만의 에너지 문제를 상징하는 원전문제, 삼림대국(森林大國)으로 특히 현저한 열대림파괴와 자원소비대국 일본의 역할, 댐개발, 농업의 공업화, 석유개발과 다국적 기업 등등의 문제와 공업화를 지향하는 발전도상국의 전형적 환경문제로 검토하겠다. 여기서는 선진국에 거주하는 발전도상국 출신자의 활동도 다루겠다. 또 ‘연구’도 광의적 견지에서 파악하고 연구자(문과계와 이과계)의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 변호사, 저널리스트, 작가 등의 조사연구활동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개의 대상이 NGO계열의 연구자에게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겠지만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정보는 일본의 관청이나 기업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보충해 주었으면 한다.

1. 동아시아의 에너지문제, 경제성장과 환경

한국의 원자력 개발과 에너지 문제

한국은 OECD에 가입한 공업국이며 1인당 자원소비도 선진국 수준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구소련이나 동유럽과 같이 ‘발전도상국적 요소를 갖는 선진국’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의 공해.환경문제와 운동전반에 대해서는 정덕수 등의 개설서가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울산 온산의 콤비나이트 공해(온산병과 같은 공해병, 대기오염, 수질오탁 등), 도시화, 소비사회화에 따르는 대기오염, 수질오탁, 폐기물문제, 자동차공해 등 공해문제가 누적되어 자연파괴 차원에서는 일본과 같은 시화지구간척 등 거대개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간척문제를 제외하면 대만도 거의 같다. 공업화의 편중에 따라 곡물자급률의 급속한 저하도 일본.한국.대만은 공통적이며 구미 각국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95년 1인당 에너지소비에서 한국은 미국의 40%, 일본의 80% 인도의 11배가 된다. 일본통산성의 장기전력 수급전망(98년)에서도 '2010년까지 원전 20기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대만도 에너지소비대국이며 원전의존도가 높고 증설에도 열성적이다. 또 이 두 나라는 일본의 산업계의 원전 수출의 표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국의 특징적인 환경문제로 원자력개발문제를 거론하겠다. 일본에서는 발전설비용량(kw)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1%, 발전전력량(kwh)에서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율은 35%이다. 프랑스는 80%, 벨기에의 60%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의 원전의존도는 상당히 높으며 미국의 20%를 훨씬 초월한다. UN의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의 77%, 미국의 20%에 대해서 일본은 29%, 한국은 33%였다. 한국은 프랑스와 같이 전국을 커버하는 국영전력기업(한국전력)이 전력을 공급한다. 일본정부는 원전의 대대적 증설을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도 같은 상황에 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간다면 장래 한국은 인구비에서 세계 제 1의 원전보유국이 되리라는 예측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똑같이 고속 증식로의 개발에 적극적이고(93년 당시) 원자력 산업계는 중국과 필리핀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카톨릭대학의 '『아시아 사회와 한국문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핵발전 반대운동에 대해서 보고했다. 한국에서 최초의 원전이 건설된 것은 78년이다. 추진파는 '원자력 발전소', 반대파는 '핵발전소'라고 부른다. 87년 민주화까지는 군사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체제가 이어졌기 때문에 핵발전 반대운동을 추진하는 사람은 반체제 운동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반핵운동의 형성에는 구미나 일본과 같이 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큰 영향을 주었다. 90년대에는 현지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89년부터 갖가지 반대운동이 나타났다. 원전주변의 사람들의 피해보상 요구운동, 농민회, 청년협의회 등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91년 6월말 이러한 지역에 조만간 17기의 원전이 건설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본래는 보수적인 청년회의소 등도 반대운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 오휘방(재일한국인 민주인권협회)이 해설한 바와 같이 1990년 안면도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계획이 섬 전체 주민의 반대투쟁으로 철회되었다. 한국의 시민운동가 김원식의 제창으로 93년부터 매년 '노뉴크스(No Nukes) 아시아 반핵포럼'이 열리고 있다. 제 1회가 일본에서 제 2회, 제 9회는 한국에서 열렸다. 또 제 6회는 타이의 방콕 백크론사프리(원전입지후보지의 하나) 등에서 열렸다. 99년 제 7회 포럼은 핵무기와 원전을 보유한 인도의 뱅거롤에서 열렸다. 인도의 원전은 해안이나 강변(구미식)이 아닌 열대우림의 사면에 건설되었다. 화학자 임벽요(林碧堯 – 대만 東海大學)은 대만의 원전문제와 반핵운동에 대한 개설서를 냈다.

공동연구 「아시아 지역의 환경사회학적 연구」는 한국의 사회경제구조와 환경문제(池田 寛二), 중화학 공업화와 공해(關札子), 핵의 상업이용(高田 昭彦), 쓰레기 문제(谷口 吉光), 환경운동(寺田 良一)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었다.

대만의 에너지 문제

대만도 한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국영대만전력공사(정부경제부 직할)가 전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부 지식인이 원전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87년 계엄령 해제와 동시에 각지에 환경보호단체가 생기고 반핵운동이 일어났다. 82년부터 핵폐기물 처분장이 된 란유도(島)에서는 생선을 주식으로 하는 선주민 야미족에 암, 지적 장해, 선천 장애 등이 증가하여 방사능 오염의 영향으로 생각되었다. 87년부터 야미족에 의한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대북(台北)에서도 지원활동이 시작되었다. 95년 중산층이 사는 대북의 고급맨션 아파트에서 방사능 오염(코발트 60 방사능이 건축용 철근에서 검출되었다)이 발견되고 그 피해자들도 반원전운동에 참가했다. 이 문제에 대한 왕옥린(王玉麟 – 맨션아파트 방사능오염 피해자 대표)의 저서가 일본어로 번역.출판되었다.

그리고 또 대만의 공해.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유학생 진예준(陳礼俊 – 쿄또 대학 대학원 에너지 과학연구과 박사과정) 등의 해설서가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자연생태계 파괴, 방사성폐기물 문제 등에 대한 책이다.

2. 공해수출과 다국적 기업의 민주적 규제

다국적 기업과 자원환경문제

페낭소비자협회(CAP)출신 마틴 코오(Martin Khor)는 ‘제 3세계 네트워크’을 주재하면서 지구 서밋트(1992년) 등 국제환경정치의 장에서 그의 발언이 주목되는 NGO의 논객이다. 코오는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경제를 분석한 저서가 있는 재야 경제학자이다. 그의 최근의 논문 「다국적 기업규제의 실패 – 글로벌제이션(세계화)과 환경파괴」에서 국련 다국적 기업센터의 폐쇄, 다국적 기업의 민주적 규제의 동향 등을 지적하면서 다음 같은 사례를 들어 ‘

다국적 기업이 환경파괴의 최대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①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효과 가스의 절반 이상은 다국적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며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② 다국적 기업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와 그것에 관련된 혼합물의 제조 이용을 사실상 독점지배하고 있다.

③ 광업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은 아직도 주요부문을 독점하고 있으며 더욱더 독점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알류미늄의 경우 고작 6개 기업이 세계의 매장량 63%를 지배하고 있다.

④ 농업분야에서는 다국적 기업은 세계의 수출곡물 생산용 농지의 80%를 지배하고 있다. 또 20개 기업이 세계의 농약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⑤ 다국적 기업은 세계 대부분의 염소를 제조하고 있다. 염소는 PCB(폴리염화비닐)이나 DDT, 다이옥신 등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의 원재료 물질이다.

⑥ 다국적 기업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생산시스템, 유해물질, 유해제품 등의 제 3세계 수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수입한 농약 25%가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회수된 것이었다.

⑦ 다국적 기업은 천년자원이나 1차 산업 무역을 지배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자원의 채취와 개발지까지 독점하고 있다. 이게 삼림, 물, 해양자원의 고갈과 열화(劣化), 유해폐기물이나 위험물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⑧ 광고나 생산촉진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은 지속불가능한 소비문화까지 촉진시키고 있다.

IOCU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페낭)의 후우 가이크 심(Foo gaik sim) 등은 발전도상국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입문서에서 수질오탁과 폐기물 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설했다.

APEC과 환경문제

미국에서의 생활을 겪은 후 타이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인 사회학자 월든벨로(Walden Bello)는 훌라론콘 대학과 필리핀 대학의 교원인데 마르코스체제의 분석과 환경문제와 남북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력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의 저서 『APEC과 환경』에서 그는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문제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NGO의 입장에서 본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환경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상위 3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다. 이산화탄소, 이산화유황,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서울의 이산화유황에 의한 대기오염과 산성비는 심각하게 되었다. 대만에서는 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방콕에서 어린아이의 혈중 납(鉛)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하천의 수은 오염이 심각하다. 타이의 챠오프라야 강의 생태계가 괴멸되고 있다.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삼림이 급감하고 있다. 토지오염, 토양유실(특히 중국)이 심해지고 있다.

환경문제에 연관된 APEC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같이 주장한다.

① APEC의 중심적 존재인 미국은 자유무역의 우위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APEC내의 여한한 노력에 대해서도 찬동하지 않는다.

② 태평양 서안지역에서의 미국의 무역과 투자의 현실을 새삼 강화하기 위해서 APEC의 자유무역 아젠다의 뒤를 미는(후원하는, 지원하는) 미국기업은 지역내에서의 사업의 비용 증가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환경 프로그램은 부정적이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도 마찬가지다.

③ 많은 개발도상국이 신흥공업국(NICs)의 개발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공해규제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으며 환경비용이 외부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국가간의 환경규제를 위해서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중에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틸 수상과 같이 환경대책이 도상국의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도 있다.

④ 본격적인 환경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몇 십억 달러라는 비용이 든다. APEC 국가 중에서 경제력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미국이나 경기후퇴의 조짐이 있는 일본이나 — 그러한 프로그램의 실시에 착수하는 데 긍정적이지 않다.

벨로는 APEC 비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① APEC이 추진하려는 자유무역은 ‘자유스럽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② APEC을 통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밀어부치는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구조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파탄을 맞은 것이다(아프리카나 중남미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처럼).

③ APEC이 무역과 투자에 한정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기업에 이익이 되는 프로세스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대체로 마이너스의 영향이다)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④ APEC은 '전체로서 비민주적이며 무책임하며 투명성을 결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APEC 각국의 국민과 정부에 대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사회와 환경 양방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협력에 나설 것.

② 무역과 투자의 모든 측면에서 사실상의 시민참가에 의한 의사결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효한 감시체제를 확립할 것.

③ 무제한적으로 규제가 없는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거부할 것.

④ 환경기준을 끌어올리고 지역 전체에서 기준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

⑤ 지역내의 평화와 군축을 촉진하는 정책과 아울러 무기 거래의 폐지를 향한 조처를 강구할 것.

⑥ 에너지와 인프라는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구조를 채용할 것. 그 하나로 원자력이나 거대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 어떠한 시책에도 반대할 것.

⑦ 다국적 기업의 사업 전개에 대해서 행동규범을 포함해서 효과있는 규제를 부과하고 APEC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

⑧ 식품의 안전성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고 APEC 각국민을 위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책임을 질 것.

자원대량구입.공해 수출과 일본의 기업

말레이시아의 공해.환경문제와 운동전반에 대해서 코시마 노부오(변호사)와 미나쿠시 라아만(Meenakshi Raman, 페낭 소비자 협회.변호사)에 의한 개설서가 있다. 일본계 기업이 많이 진출한 페낭주의 푸라이 공업단지의 산업공해, 미쓰비시 화성(현 미쓰비시 화학)의 자회사 ARE사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오염(소아백혈병, 소아암이나 선천성 장애의 증가), 산업 폐기물 문제, 페낭 힐 등의 리조트.골프장 개발문제, 산악고속도로 건설문제(토사붕괴와 산악파괴 가능성을 지적한), 바쿤 댐(수력발전소)건설문제 등이 기술되었다. 수원이나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문제된 페닝 힐의 리조트개발 반대운동은 페낭소비자협회, 마라야 자연보호협회, 말레이시아 환경보호협회, 말레이시아 노조조직,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 직원

협회, 아리랑페낭주청년회의, 말레이시아 이슬람청년회의, 정의와 평화위원회 등 많은 단체가 결집하여 1992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페낭주 정부는 개발단념을 성명하게 되었다.

필리핀의 변호사 글리젤다마요난다는 필리핀의 환경문제와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훌륭하게 서술을 했다. 1990년 루송도 중부 대지진, 1991년 피나투보 화산 분출, 레이터 섬의 태풍 등의 자연재해의 피해는 계곡의 산사면에 나무가 없었고, 헐벗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었다. 필리핀 국토의 산림 피복율은 52년에 72%인데, 88년에는 약23%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난벌때문이지만 60년대 일본의 대량수입에 의해 특히 두드러진 원인이 되었다. 일본은 61년 목재수입 자유화 이후에 순차적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아 등에서 수입이 급증되었다. 한편,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스기, 히노끼 등 일본의 목재는 이용되지 않은 채 황폐화되었다.

1970년대에 대규모사업을 전개한 세로필 자원회사는 마르코스 대통령계와 일본기업의 합작회사인데 이들이 일본기업용 펄프, 셀로판, 레이욘을 생산하는 바람에 삼림파괴, 수질오염, 어업자원파괴 등의 환경파괴를 가져왔다. 피렉스도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금동을 채굴했는데 동은 주로 일본 수출용이었다. 70년대에 광재에 의한 수질오탁을 일으켰다. 필리핀공동제련회사는 레이테 공업단지에 일본으로 보내는 동을 제련하고 있으며 기술면에서 일본기업의 관여도가 크다. 해양오염, 수질오탁, 대기오염, 토양오염, 노동환경오염, 주민의 강제퇴거, 마르코스 대통령의 명령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면제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카와사키제철도 70년대부터 소결공정의 민다나오 섬 이전에 따른 공해수출로 문제가 되었다. 카라발 계획은 일본의 지역종합개발을 모델로 한 것인데 계획을 구성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카라발 석탄화력 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호흡기질환, 어획량감소, 라그나 호 개발에 의한 수질오탁 등이 문제가 되었다. 필리핀 합동 그리스도 교회의 준엘브에노도는 카라발슨 계획에 수반된 카라카 발전소 문제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처럼 아시아의 개발독재를 대표하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1965 ~ 1986)이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1965 ~ 1998)은 자원의 난개발, 주민운동의 억압, 다국적기업과의 유착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관련된 일본정부와 기업의 책임도 거듭 지적된 바 있다.

개발독재정권의 에너지개발과 일본

조지아디촌드로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환경엔지오 WALHI(인도네시아환경포럼)의 창립 멤버중의 한사람인데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아사한 댐의 건설을 추진한 수하르토 정권의 전략과 매스컴을 분석했다. 추진파는 토착신화와 화란의 침략과 싸운 영웅의 전설.종교.문화 등을 교묘하게 조율하면서 댐계획의 정당화와 토착화를 도모했다. 아사한 댐이 발전한 전력의 대부분은 일본계 기업 등에 의해서 소비된다. 그리고, 같은 인도네시아의 저널리스트 모흐타르루피스는 칸사이 전력의 자회사가 입지를 조사하고 수하르토 정권이 일본의 원자력산업과 연결해서 추진시키려던 무리야 원전 계획에 대해서 지진지대에 건설하려는 위험성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시민참여가 결여되었음을 비판하고, 일본에 왔을 때에는 각지의 반원발운동과 교류했다. 파자자랑 국립대학의 농예화학자 알리 수피안티는 자바섬의 카라완 지역을 예로 들어 새우양식과 망그로브 숲 파괴에 대해서 보고했다. 농업생태학자 모하메드 소르자니 등은 아시아각국의 환경교육에 대한 논문집을 편찬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환경문제전반에 대한 것은 일본의 연구자가 쓴 개설서가 있다.

구소련이나 중국도 마르코스 시대의 필리핀과 수하르토 시대의 인도네시아와 체제가 다르지만 구미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개발독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미사일 공학자였던 저널리스트 대청은 양자강의 삼협 댐을 비판한 책을 편찬하기도 했다. 이책은 중국에서 판금되었으며 1994년 캐나다의 NGO 푸로브인터내셔널에 의해서 영어번역이 출판되면서 국제적 반응을 일으켰다. 논점은 문화재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재정, 수운, 퇴사, 치수, 발전, 주민 이전 등 다방면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의 골드만 삭스 환경상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의 공해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재일 중국인 공학자의 개설서가 있다.

아프리카 독재정권의 거대개발과 다국적 기업

앞에서 마르코스 정권 등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여기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의 대국 나이지리아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나이지리아의 켄사로위와는 작가이면서 환경활동가인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1995년 11월 10일 날조된 살인용의로 처형당했다. 88년 지주들에게 암살 당한 브라질의 시코멘데스의 경우와 같이 문자 그대로 환경보전과 인권옹호에 생명을 바쳤다고 할 수 있겠다. 나이지리아는 석유의 태반을 소수민족 오고니의 거주지 니젤강 삼각주에서 산출하는데 채굴은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쉘(영국.네델란드)과 셰무론(미국)이 관여한다.

외국기업과 군사독재정권의 밀접한 협력관계에서의 석유개발이 오고니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을 파괴한 것은 사로위와의 유작이나 영국의 TV 작품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출신민족이 당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항거한 오고니 생굴운동이라는 NGO를 조직했다. 오고니족이 처한 상황은 그가 기초한 오고니 인권선언(90년)등에 묘사된다. 석유 파이프라인의 파손으로 토지오염 등 자연환경파괴, 석유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의 성과가 환원되지 않으며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의사표명의 차단 등 사회환경문제와 오고니 말에 의한 교육기회의 박탈과 다른 언어의 강제 등 문화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3. 농업의 공업화, 삼림파괴, 선주민족의 인권

동남아시아의 삼림파괴와 선주민

아세안 여러나라 중에서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와 함께 삼림대국인 말레이시아의 삼림파괴를 거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발전도상국의 환경NGO와 활동가로 국제정치의 장에서 현저한 것은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라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의 이블린 홍은 재야인류학자로 페낭소비자협회의 연구원이다. 홍은 보르네오섬에 거주하는 선주민의 전통적 화전은 열대림의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것이지만 삼림 채벌이나 수력발전 댐 등 근대적 개발은 그들의 생활기반을 파괴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그려냈다. 보르네오섬의 전통적인 화전에 관한 필드워크(현장활동)는 임학자의 업적과 대비할 수 있다. 또 식물학자 S.C.친도 선주민의 화전은 조방적이기 때문에 인구부양력이 작지만 환경과 조화된 농법이라고 지적했다. 화전은 상업벌채나 연료채취 등과 더불어 열대림파괴의 주요원인이 되는 일이 많고 말레이시아정부도 선주민의 화전을 열대우림 파괴의 주요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지적은 중요하다. 열대림을 파괴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갖는 선주민의 화전이 아니라 국책으로 이주한 도시빈민층이나 토지 없는 농민의 화전이라고 했다.

또 파푸아뉴기니아의 화가이며 환경활동가 마론퀠린나드는 일본 등 선진국기업의 열대림 파괴의 책임과 주민의 생활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그림과 글로 호소했고 일본의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일본에 온 일이 있다(1998).

홍(hong)이 소속된 CAP는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의 하나인데 1970년 이 단체

를 설립한 안와르 파잘을 78년 구미인이 아니면서 최초로 국제소비자기구(IOCU)회장에 취임했다. 파잘이 소비자문제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환경문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했다는 것은 일본에서 편찬된 그의 강연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강연에서 분유문제(연료와 깨끗한 물에의 접근이 곤란한 발전도상국에서 네슬레사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모유대체품 판매가 유아의 감염성 설사사망을 다발했다)와 합성세제 오염과 원전 등 소비자 환경문제를 수 차례 거론했다.

타이의 해양학자로 출라론콘 대학 이학부 교원인 스라폴수다라는 소다회 공장의 부적절한 입지에 반대하는 운동에 관계한 이후부터 연구자로서 운동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운동의 네트워크에 나서게 되었다. 파크문 건설에 따르는 환경문제와 어떤 종류의 어류의 절멸, 주혈흡충증의 증가 등 유카리식물과 일본의 OA용지수용의 증가, 새우양식(일본으로 수출)과 망그로브숲 파괴 등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대답했다. 1993년도 오꼬오에서의 심포지움에서 삼림파괴, 유칼리식림 메콘강에서 타이 등 북부로의 도수계획, 제지공장에 의한 오염, 새우양식과 망그로 숲 파괴, 지하수 채취에 의한 지반 침하, 교통사고 다발, 원전문제 등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타이의 공해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손니말라카발(출라론콘 대학 환경센터)등의 해설서가 있다. 솔로몬군도의 삼림파괴와 동남아시아의 기름야자 재배에 따르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은 크다.

인도에서의 녹색혁명과 유칼리식림

‘농업의 공업화’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대표적 사례로 여기서는 인도를 들었다. 인도의 반다나 시바는 물리과학철학을 전공한 재야연구자인데 ‘과학기술 자연자원 정책연구재단’을 주재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생물과학에 대해서 비전문가였으나 농학자 등의 협력으로 ‘녹색혁명’이나 유칼리식림 등 ‘근대농림기술’ 또는 ‘농업의 공업화’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쌀과 밀의 녹색혁명은 품종획일화에 따른 재배식물(특히 재래품종)의 다양성을 파괴했고,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해서 오염을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기타작물 특히 콩이나 식용유작물의 감소로 이어지며, 빈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비판했다. 유칼리는 외래식물 중에서도 특히 토착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물을 낭비하고, 펄프원료 이외의 용도가 없는데다, 5가지 F(식량,사료,비료,섬유,연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일찍이 1983년 영국의 『에코노미스트』에 유칼리식림 비판에 공저논문을 발표했

다. 그리고, 브라질의 NGO는 유칼리식림을 비판한 영상작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시바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유칼리식림에 관한 일본기업의 책임도 지적되었다.

또, 시바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특히 DNA조작기술에 대해서 생태계의 영향, 개발목적이 제초제 내성 품종에 치우치는데서 오는 농약오염(제초제의 사용량은 감소되지만 작물에 남는 농약성분이 증가한다), 다국적기업지배의 강화, 지적재산권 옹호 등을 통한 선진국지배의 강화 등을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그후에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잇다. 그러나, 이것은 시바나 필리핀의 유기농업자 닉카도펠라스 등 뿐 아니라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을 불문하고 많은 활동가와 NGO계열의 연구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이용’(예를 들면, 인간의 인슐린생산)의 조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네루 기념박물관의 라마찬드라구하는 환경사회학의 논문집을 편찬했으며 인도농촌의 에너지문제, 켈라라주의 수산자원남획, 히말라야지방의 삼림파괴, 야생생물보전과 인간생활의 갈등 등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1988년에는 인도의 과학연구소 내분비학자 코추필라이가 일본에 와서 켈라라주의 자연방사능문제, 반원전운동, 히말라야의 삼림파괴 등에 대한 강연에서 보고했다. 저널리스트 아닐아갈왈은 ‘과학과 환경센터’를 주재했고, 세계최대의 화학재해로 꼽히는 보팔 농약공장 사고(유니온카바이드사의 자회사가 농약원료 유출사고, 84년 발생)에 대해서 정력적인 조사활동을 했으며, 91년에는 지구온난화문제로 미국의 싱크탱크 세계자원연구소와 논쟁했다. 보팔재해(사망자 10.000명 이상, 재해자 수십만명)가 빈곤층에 집중된 사태 등 그는 세계의 환경파괴구조에 대해서 ‘잘사는 사람이 파괴하고, 빈곤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온난화 논쟁에서 환경정화력 등 지구공유자원은 각국의 오염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WRI는 각국의 온실효과 가스방출량을 다시 산출했다. 1인당 자원소비량 오염배출량에서 거대한 남북격차를 염두해 두고 하는 얘기이다. ‘제3세계 네트워크’멤버이며, 제네바에 거주하는 인도인 저널리스트 차크라바티라가반은 ‘GATT 감시’로 유명한데 저서 『재식민지화』에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은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제3세계의 ‘재식민지화’와 환경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선주민과 환경문제

제3세계 인터프레스 서비스가 편찬한『앤소로지』에서 마야(과테말라), 테레나(브라질), 케추아(페루), 라파누이(이스터섬), 라우(솔로몬 군도), 프리(파푸아뉴기니아), 아에타(필리핀), 그룬(네팔), 치프코(인도), 바스트(레소토), 마사이(케냐), 누비아(이집트) 등의 선주민이 그들의 경험을 통한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보고에는 나무땔감에 대해서 벌채허가를 얻은 대회사가 당국의 감독불충분으로 벌채허가의 10배나 벌채하고 조금만 벌채하는 선주민은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이 되어 벌금을 물게된 예를 제시하고 난개발로 ‘자연과 자원을 존경하는자(선주민)와 최대의 피해자’ 라고 했다. 이러한 선주민의 증언은 그들의 자연 조화적인 전통문화와 근대적 개발주의의 알력을 기술했다. 문화인류학자는 선주민의 입장에서 환경문제를 주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반생명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 지 오래다.

환경운동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저항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아나키즘 사회학도 기성사회학에 대한 저항에서, 그리고, 제 3세계의 환경운동도 역시 제 1세계에 대한 저항운동이 그 핵심이다.

(번역은 참 어렵다. 늘 불안하다)

– ㅎ –

다음의 글귀는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

“그들의 사고가 과연 진정한 관심을 다루는 것으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진보적인 잡담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혁명이 ‘생명의 실체를 실제로 제공하는 생생한 경험’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재미를 위한 시간 때우기 에피소드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 (머레이 북친)

아나키스트 사회학 서설은 위 물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 등대2 –

‘에코아나키즘’, ‘모색’, ‘환경과 반차별’, ‘반차별’ …… 몇 번을 저울질하다, 쫒기듯이 정한 이번 소책자의 제호다. 우선은 만족하지만…….

‘상계동 모임 발행 동인’.

아직 스스로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친근해질 수 있을까……?

이틀 전 일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난 여름 일본기행에서 만난……, 스스로를 “지금도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소개하던 54세의 히모리 아저씨. 지난 주 토요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항의해 도쿄 시내, 중앙 공원에서 스스로를 불살러셨다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군요.

히모리 아저씨, 명복을……

– 빵돌이 –

자매지(姊妹紙) 소개(가격 1.500원)

- 상계동 모임 소식지 1호(부정기) (2001. 11. 26)
  - 무까이 꼬오의 방법으로서의 아나키즘(강추)
  - 비전(非戰)
  - 대담 – 9.11 미국테러에 대하여
  - 한국인의 아나키즘 수용과 전개 …… etc.

상계동 모임 발행 동인 刊

- 환경과 反차별 소책자 No. 1.
- 펴냄 : 2002년 4월 4일(목)
- 연락처 : http://cafe.daum.net/anarchism
- 판매 : 1.000원
- 우편 발송 가능 : 2권 이상, 우편 실비 추가